

접경지역 상인의 눈물 - 소외를 넘은 공존을 바라며

KBS 춘천

김영준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KBS춘천방송총국 취재파일 집중 보도 장면

상인은 울었다.
상점 매출이 떨어져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제재나 규제만 있지. 규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보려면 이걸이래서 안 돼. 상수원보호지역이야, 산림보호구역이야. 군사지역이야. 할 수가 없어요.”

상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변화한 상점가이다. 식

당과 PC방, 편의점 등 150여개 상점이 원통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나비 날개 모양으로 퍼져 있다.

바로 인근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터미널에서 최전방 지역까지 구불구불한 편도 1차로의 긴 도로를 따라 포병 부대와 보병 부대 등 군부대가 연이어 있는 최전방 지역이다.

접경지역 매출 상황을 묻는 인터뷰를



군 장병을 봄이라고 부르는 화천군 사내면 상점가

시작하기 전 40대 상인에게 올음의 이유를 물어보았다.

내심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겠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이 지역은 정전(停戰) 이후 상점가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특별한 경쟁 없이 호시절을 보냈다. 옛된 장병들은 이 주변에서 가족과 연인을 만났고, 고향으로 가기 위한 시외버스를 기다렸다. 그리고 소비를 했다. 수많은 장병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끊이지 않고 존재했기에 상점가는 밤낮 없이 성업 중이었다.

상인의 올음의 이유는 간명했다.

“누가 여기서 희망을 꿈꾸며 살겠어요.” 희망의 상실이다.

장사가 예전처럼 잘되지 않아서 슬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인은 첫 번째 위기가 ‘군 장병 위수 지역 해제’였다고 말했다.

2018년 초에 시행된 군 장병 위수 지역 해제 조치는 접경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군 장병에 의존하는 자영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 장병 위수 지역 해제는 문화와 경제활동 기반이 부족한 접경지역에 직격탄이었다.

접경지역 상인들은 국방부의 위수지역

결제금액	환급금액
12,500원 ~ 24,999원	5,000원
25,000원 ~ 44,999원	10,000원
45,000원 ~ 59,999원	15,000원
60,000원 ~ 74,999원	20,000원
75,000원 ~ 89,999원	25,000원
90,000원 ~ 104,999원	30,000원
105,000원 ~ 124,999원	35,000원
125,000원 ~ 139,999원	40,000원
140,000원 ~ 159,999원	45,000원
160,000원 ~	50,000원

● 지역상품권 발행단위(5,000원권)에 따라 구간별 평균 30%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 군사령(신분확인)이 나라사랑카드로 결제 시 환급해드립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팻말



접경지 상점 교육 수료 명패

해제 결정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생계 위협 목소리는 이내 묻힌다. 오히려 오랜 시간 이어진 바가지 장사. 접경지 상인들을 비난하는 옛 장병들은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군 장병을 볼모로 장사를 이어갈 것이냐는 비판이다.

뒤늦었지만 자치단체는 군 장병 편의를 위한 휴식과 여가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망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이미 1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도심지로 나가는 군 장병의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장병들은 가격의 차이보다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심리적 거부감에 접경지역 안에 머물지 않으려 했다. 이제

주둔 지역을 벗어나 외박을 나가는 이른바 ‘점프’는 장병의 당연한 권리가 됐다. 이런 상황이 2년여 동안 이어졌다. 접경지 상점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접경지 상점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군 장병 할인 업소가 늘어나고, 친절 행사와 자매 결연 행사가 이어졌다. 군 장병을 포용하기 위한 변화의 물꼬였다. 식당에는 군화를 벗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탁자가 놓였다. 식재료 원산지도 가격 표시도 확실히 하고, 음식의 맛도, 서비스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접경지역 민과 軍 상생의 새로운 물길이 트이려 하던 때였다. 흐느끼는 상인의 가게도 군 장병

우대업소이다.

2019년 말, 국방개혁 2.0이 본격화됐다. 수 년 동안 군사기밀로 봉인돼 있던 국방 개혁들이 실제로 시작됐다. 전방 부대들은 사단과 연대를 중심으로 통폐합됐다. 최전방 곳곳에 산재해 있던 대대급 부대들은 사라졌다. 축구장 20~30개 크기의 부대 땅과 노후된 부대시설은 남아 있지만 젊은 장병들은 사라졌다.

인구 감소의 예가 노도부대가 있었던 강원도 양구군이다. 노도부대로 알려진 제2보병사단은 1949년부터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을 지키다가 2019년 12월 통째로 해체됐다. 70년 만이다. 지역 인구는 급감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한 예비역 대령 출신인 한 취재원은 10년 뒤 양구군의 인구는 군인과 공무원뿐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추론은 이렇다. 양구군의 현재 인구는 2만5000명. 서울 강남구 인구 54만 명보다 21배 적고,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인구 5만 명보다 2배 적다. ‘초미니’ 자치단체이다. 양구군 인구 2만5000명 중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8000명 가량이다. 그 군 장병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상업 인구가 4000여 명에 이른다.

이 군인 상당수가 군부대 통폐합으로 사라진다고 가정할 때(실제 사라졌거나 내년 말까지 사라질 예정이다.) 군인 대상

자영업을 하던 인구 4000여 명도 사라질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은 인구는 1만여 명.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이거나 남아 있는 군부대 장병이라는 가설이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현실이다.

이 암담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상인들이고, 지역의 청년층이다. 군 장병에 의존한 경제를 대체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 발생이 높은 제조업의 비중은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우 지역 산업 전체의 2.4%이다. 대부분이 1,2개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 20~30개가 제조업의 전부인 상황이다.

그리고 2020년, 위기 속 새로운 변화를 찾고 있던 접경지역엔 ‘카운트 펀치’가 날라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

대한민국 어디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었다. 접경지역은 더욱 힘들었다. ASF,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의 산과 도로에는 철제 울타리가 쳐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진 철조망은 을씨년스러웠다. 하천과 산림은 철조망을 앞두고 바라보는 풍경이 되고 말았다.

악재에 악재가 더해지면서 바닷가 지



접경지역 폐업 상점

역과 달리 내륙 접경지역의 주요 관광 자원인 안보 관광지의 폐쇄가 이어지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DMZ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 관광지는 올 스톱됐다.

1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접경지역 상점의 매출은 51%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실제 주요 타격 업종인 여관 등 숙박 시설과 체험시설, 주점 등의 매출은 80% 이상 줄었다고 한다.

상인이 희망이 없다고 절규한 이유이다. 그래도 생업은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군인과 관광객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최전방 닭갈비 가게는 크로켓을 팔게 됐고, 백반 집은 배달을 시작했다. 여관은 새 단장 공사를 시작했고, 관광지는 임시 휴장하며 시설을 점검했다. 기약은 없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발등의 불. 접경지역 자치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개정해 쓸 돈을 만들자는 요구이다. ‘폐특법’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접경지역의 어려움

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한다. 접경지역의 위기를,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의 강원도 폐광지역의 모습은 어떤가? 인구는 15여 년째 줄고 있다. 내리막을 달리는 롤러코스트 같다. 폐광기금 수 조 원이 쓰였다.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섰고, 화려한 개막식과 개장식을 열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정선군이다. 강원랜드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가 2000년 운영을 시작했다. 1998년 ‘폐특법’에 근거한 공공시설이다. 하지만 지역 인구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2011년 정선군의 인구는 4만 명. 현재 인구는 3만6000여 명이다. 4000명 줄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폐광지역과 비교해 접경지역은 어떠한가? 이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특수상황지역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건축물이 지어지고,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투자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이런 저런 접경지 균형 개발을 위해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1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여전히 아우성이다.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값싼 군유지에 10억 정도하는 건물을 세



철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텅빈 상점가

우고 집기를 채워 넣었을 뿐이다. 이후 소득 없는 건물로 전락했다.

여러 가지 접경지역 지원 사업과 접경지역의 어려움, 경기 침체, 상인들의 좌절감, 청년들의 이탈 현상, 텅 비어 가는 농촌마을과 견고히 잠겨버린 채 녹슬어가는 군부대 시설들을 바라보면서 되돌아보게 된다. 비정기적인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에서 하는 규제 완화는 접경지역의 회생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접경지역 주민은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20대 초반의 장병을 ‘봉’으로 여기는 상인들의 폭리와 장병을 홀대하는 접경지역의 분위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쳐지고 또 고쳐져야 한다. 그래도 비난만 하고 있기에는 접경지역이 일촉즉발 위기가



코로나19 여파로 산천어축제가 취소된 화천군 시내 전경

다. 현재의 소외를 대처 없이 이어가다보면 소외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 접경지가 아닌 우리 사회의 위기가 된다.

지금은 접경지역이지만 언젠가는 한반도의 평화지역이기 때문이다. 평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빼놓을 수 없지

않은가? 미래의 소중한 가치가 있기에 산림과 하천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도 일시에 풀 수 없다. 또 휴전 중이라는 상황 속에서 안보라는 국토방위의 최전선의 역할도 방기할 수 없다. 해법이 필요하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라 불리는 최전방 지역의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올해 4월 말부터 지상 15m 고도 제한에서 45m로 완화됐다. 기존 5층 높이 건축물에서 15층 높이 건물까지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군 당국과 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이 4년 동안 상생 의제로 협의해 낸 결과물이다. 자립을 위한 여건이 일부 만들어진 것이다. 함께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이다.

소외가 아닌 공존(共存)의 희망을 함께 찾아야 눈물을 닦고 웃을 수 있다.